

종합·해설

“엑스포 성공 위해 다시뛰자”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민의 역할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강동석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은 9일 “여수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오험전 시장 비리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여수시민과 전남도민이 심기일전,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새롭게 출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여수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박람회 개최를 600여일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도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지난날의 생체기를 빨리 치유하고 여수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다시 한번 뛰자”고 말했다.

두 번의 도전 끝에 유치한 박람회 인 만큼 충격을 뒤로 하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박람회 전시시설 및 숙박시설 건립 등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또 박람회장 예정지인 여수 앞바다 수질 오염 문제와 관련, “현재 박람회 예정 수역은 3급수 이하로, 불과 1m도 앞이 보이지 않고

엑스포조직위·전남도 공동 기자회견

“박람회 수역 수질 2급수 확보할 것”

“정부 정책 방향 고려 北 참가 노력”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600여일 앞둔 9일 강동석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왼쪽)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angju.co.kr

불쾌한 냄새도 난다”면서 “육지에서 육지로 나오는 오염물을 차단하고 퇴적 오니가 쌓인 바닥을 준설하는 한편, 오염된 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박람회 전까지 최소 2급수 이상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바다전시장인 빅오(Big-O)에 오션타워가 없어지는 대신 세 계적인 해상무대와 둥근 원형의 상징 구조물을 만들어 박람회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여수박람회 참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BIE(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으로 당연히 참가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북한이 참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현재 서들과 여수에 분산된 조직위사무실을 내년 7월께에 여수로 모두 이전하겠다”면서 “오는 15일 여수시민의 날 맞아 ‘박람회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한 봄 조성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지사도 “박람회 성공 개최에 도움이 되는 SOC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며 “조직위와 도는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angju.co.kr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이 9일 오전 여수시 경도에서 열렸다. 박준영 도지사와 강동석 여수시장, 지역주민 등 참석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angju.co.kr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첫 삽

3200억 투입 엑스포 숙박시설·골프장·해양체험 공간 등 조성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숙박·관광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됐다.

전남개발공사는 9일 경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강동석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개발공사는 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2012 이후 추가로 숙박시설(200호)을 건립하는 한편,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360실의 콘도·호텔을 건설한다는 구상도 세워놓았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여수박람회를 앞두고 여수시의 부족한 숙박시설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angju.co.kr

자기검증서 문항 150개→200개로

고위 공직자 검증 강화…현장조사·주변 탐문 그물망 체크

청와대가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인사 겸증 시스템 개선안은 질적 측면에서의 겸증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고위직 인사 때마다 문제가 생긴 것은 겸증의 범위가 아니라 질과 강도에 있었다는 판단과 청와대 겸증시스템의 부실 논란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모의청문회=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유력 후보자들에 대해 ‘모의 인사청문회’를 실시로 한 것이다.

청와대는 모의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자를 최종적으로 가려내는 동시에 공직 후보자가 국민 정서에 맞는 눈높이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의 권한도 민정수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검증위원회 못지 않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추천위는 대통령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무수석, 민정수석, 총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수석과 인사비서관 등 모두 10명이 참여한다.

◇자기검증서=인사검증 막판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로부터 받아왔던 ‘자기검증서’를 겸증 초기 단계에서 모든 예비후보들로부터 받아 검증한다.

또한, 자기검증서 항목을 기준 150여개에서 200개로 늘렸으며 새로 추가된 40개 항목은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개 항목은 9개 분야로 나누어 있는데,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질문이 40개로 가장 많고, 직무 윤리(33개), 사생활(31개), 납세 의무(26개), 전과 및 징계(20개), 연구 윤리(15개), 병역 의무(14개), 학력 및 경력(12개) 등의 순으로 많다. 청와대는 자기 검증서 문항을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물망 체크=자기검증서에서 재산 관련 주가 부문은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 주택 매입 여부 ▲경제력이 없던 시절 부동산 매입 여부 ▲미성년, 무소득 자녀의 고액예금 보유 여부 ▲세금 회피 목적의 주식·예금 분산 여부 ▲주식 우회상장 여부 ▲파생금융상품 매매 여부 등으로 빠져나갈 틈이 거의 없다.

심지어 최근 5년간 본인,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연간 합계액이 총 소득의 10%에 미달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있다.

또한, 세금 및 준조세 부과와 관련한 검증 기준도 강화됐으며 성희롱을 포함한 도덕적 문제도 검증한다.

한편, 청와대는 현장조사와 주변 탐문도 대폭 강화한다. 인사 검증을 거친 후보자에 대해 아동이나 언론에서 추가로 흡집을 찾았을 때는 일어 없도록 확실한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angju.co.kr



정책 결정 당 입김 커질 듯

한나라 ‘공무원 특채 50% 확대안’ 백지화 시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과동이 5급 공무원 채용시 절반까지를 외부 전문가로 특채하던 정부 방침을 좌초시켰다.

한나라당이 9일 정부와의 협의에서 향후 3~4년에 걸쳐 5급 신규 공무원의 50%를 특채로 선발키로 했던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백지화시키고 현 제도 유지인을 관찰시간 것이다.

지난달 정부가 이 방안을 당과의 조율없이 발표할 때부터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 들끓었던 반대의 목소리가 결국 관찰된 것이다.

당에서는 그동안 행정고시 선발비율의 축소를 놓고 “서민 자제의 신분 상승 기회를 박탈한다”(홍준표 최고 위원), “강박관념에서 나온 한 건 주의 전시 행정”(정무언 최고위원)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여기에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과동이 터지면서 정부의 특채 확대 방안에 대한 여론이 극도

외교통상부 특채 파동

기획조정실장 보직 대기

인사기획관은 보직 이동

로 악화됐다. 결국 행안부안이 정부의 국정지표인 친(親)서민과 ‘공정한 사회’에 역행한다는 여론에 부딪히면서 더 이상 특채를 확대시킬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향후 당정 협의에서 한나라당은 당의 입김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심의 최첨단에서 있는 당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이 ‘내국민 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이다.

실제 ‘8·8 개각’에서 발탁된 총리 후보자·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인사의 낙마에 당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담뱃값 인상 등 당과 사전 협의의여이 발표된 정책의 경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말하는 것을 하늘처럼 명심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에서는 그동안 행정고시 선발비율의 축소를 놓고 “서민 자제의 신분 상승 기회를 박탈한다”(홍준표 최고 위원), “강박관념에서 나온 한 건 주의 전시 행정”(정무언 최고위원)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백지경기자 jkpark@kangju.co.kr

외교부 특채 파동

기획조정실장 보직 대기

인사기획관은 보직 이동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과동이 5급 공무원 채용시 절반까지를 외부 전문가로 특채하던 정부 방침을 좌초시켰다.

한나라당이 9일 정부와의 협의에서 향후 3~4년에 걸쳐 5급 신규 공무원의 50%를 특채로 선발키로 했던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백지화시키고 현 제도 유지인을 관찰시간 것이다.

지난달 정부가 이 방안을 당과의 조율없이 발표할 때부터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 들끓었던 반대의 목소리가 결국 관찰된 것이다.

실제 ‘8·8 개각’에서 발탁된 총리 후보자·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인사의 낙마에 당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담뱃값 인상 등 당과 사전 협의의여이 발표된 정책의 경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말하는 것을 하늘처럼

명심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에서는 그동안 행정고시 선발비율의 축소를 놓고 “서민 자제의 신분 상승 기회를 박탈한다”(홍준표 최고 위원), “강박관념에서 나온 한 건 주의 전시 행정”(정무언 최고 위원)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여기에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과동이 터지면서 정부의 특채 확대 방안에 대한 여론이 극도

/백지경기자 jkpark@kangju.co.kr

한나라당이 9일 정부와의 협의에서 향후 3~4년에 걸쳐 5급 신규 공무원의 50%를 특채로 선발키로 했던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백지화시키고 현 제도 유지인을 관찰시간 것이다.

지난달 정부가 이 방안을 당과의 조율없이 발표할 때부터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 들檄었던 반대의 목소리가 결국 관찰된 것이다.

실제 ‘8·8 개각’에서 발탁된 총리 후보자·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인사의 낙마에 당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담뱃값 인상 등 당과 사전 협의의여이 발표된 정책의 경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말하는 것을 하늘처럼

명심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에서는 그동안 행정고시 선발비율의 축소를 놓고 “서민 자제의 신분 상승 기회를 박탈한다”(홍준표 최고 위원), “강박관념에서 나온 한 건 주의 전시 행정”(정무언 최고 위원)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여기에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과동이 터지면서 정부의 특채 확대 방안에 대한 여론이 극도

/백지경기자 jkpark@kangju.co.kr